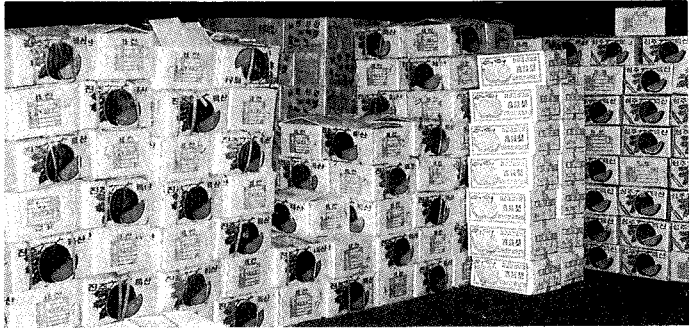


# 자본·기술집약형 수출농업으로 농업생산의 국제경쟁력 높여야



—개방화와 우리농업의 나아갈 길—

강 인 태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

## 1. 농업의 여건변화

우리농업은 1960년대초 까지 만하여도 자급자족 위주의 가족노작(家族勞作) 경영을 하여오다가 경제의 고도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생산구조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는 생산기술 발전에 의한 토지생산력의 증진이고, 둘째는 청장년의 도시진출로 인한 농업노동력의 감소이며, 셋째는 농산물 수요구조의 변화에 따른

성장농산물(成長農產物) 생산으로의 편중성이고, 넷째는 농업기계화의 급진적 발전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과거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생산력 증대가 주요과제가 되었던 점에 반하여 농업과 공업간의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고 농업도 상업적 농업의 형태로 바뀌어지면서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농업도 기업적 측면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경영으로 보는 인식이 커지게 되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농산물의 수입개방이 현실로 가시화(可視化)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농업에 주는 문제는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수 없다.

그리하여 농업생산력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가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 이전에 우리농업이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마저 팽배해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에 대응할만한 농업의 구조개선이 매우 제약적(制約的)이라고 볼때 농업을 경영으로 영위하는 기능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와 확대재생산(擴大再生産)이 어렵다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며 한편으로는 농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든다.

농업이 경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농업이 재생산의 조건을 갖기 위하여는 생산력 향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규제하는 기본적 조건은 경영규모이다.

우리나라는 '70년대에 들어와

생물적 기술개발에 의한 생산력 향상을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기술은 농업노동력이 감소하는 형편에서는 노동투하의 집약화가 노동수단의 고도화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기계이용에 의한 경지확대를 요구하게 됨으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생산력 향상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한편 경영면적 제약은 토지이용 체계를 선택하는 데도 규제작용을 하므로 합리적 작부체계를 저해하게 된다.

## 2. 개방화와 우리농업

우리는 싫든 좋든간에 농산물의 개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공업우선정책으로 우리농민이 이렇게 희생되어야 하느냐고 야단들이다. 사람들은 흔히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은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정을 알고보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농산물을 수입해 오지 않는다면 약30억불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농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공산품을 사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간 600여억불의 수출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다. 우리육심 같아서는 둘을 다 갖고 싶지만 양자택일을 해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여기에 바로 정부당국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17%의 농민도 중요하지만 83%의 기타국민도 필요하며 9%의 농업생산도 중요하지만 91%의 비농업생산(非農業生産)도 중요한 것이다. 다만 비농업생산 때문에 농업생산이 희생되어야 하느냐고 한다면 대답이 궁색해지지만 그것은 보편타당성의 원리에 어긋나고 사회정의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한편 사람들은 농산물의 개방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여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당혹스러운 요구다. 농산물 수입개방화란 말은 한국 농업이 전세계를 향하여 경쟁을 하여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농민들이 노력만하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문을 활짝 열었을때 주된 경쟁대상국은 미국이 될 것이다. 미국은 호당 경지면적이 180ha로서 우리나라의 1.2ha와 비교한다면 약 160배나 된다.

한편 미국은 이용가능한 면적이 무한하여 구조면에서 경쟁이 불가능하다. 미국농업은 자본화되어 있고 기계화되어 있으며 전문화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노동집약적이며 복합적 영농을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고 볼때 30억불을 택하느니 보다 600억불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그러나 농업, 농민을 버릴수도 없는 입장에서 진퇴양난에 처한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 3. 우리농업의 전개방향

첫째, 우리농업은 자본, 기술 집약형의 수출농업이 전개될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돼지, 닭, 오리, 명크등의 중소가축과 고급 채소와 과일, 특용작물, 꽃, 고급산채등을 효율적으로 개발한다면 일본으로의 수출전망이 밝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위의 품목에서 많은 농산물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 일본으로 수출되는 농축산물은 돼지고기, 닭고기(절단냉동), 오리고기, 천연꿀, 송이버섯, 야채, 오이절임, 밤, 메론, 꽃감, 생강, 메밀, 종자, 홍삼, 백삼, 죽순, 등나무, 오배자, 갈잎, 참기름, 땅콩등 다양한 품목들이다.

21세기의 정보사회에서는 다 품목 소량생산(多品目少量生産)체제로 발전한다고 볼때 위품목은 자본기술 집약형인 것으로서 미래농업의 전개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둘째는 대규모 위탁영농(委託營農) 회사형태의 농업이 전개될 것이다.

대규모 경제에만 치중했던 사회주의 집단농장이나 협업농의 장점과 개인의 인센티브를 중요시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농

(企業農) 체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농업형태가 소농구조 아래서는 바로 대규모 위탁영농회사이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농업은 국제화시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현재도 전남북 평야지에서는 많은 위탁영농회사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셋째는 주말농장(週末農場)에 의한 토속적 자연식품 생산농업이 성행할 것이다.

농지를 영세하게 소유한 농민들이나 부재지주들이 토지를 전문농(專業農)에게 매도나 임대해주면 규모화에 의한 생산성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를 보더라도 소규모 토지를 소유한 농민이나 부재지주(不在地主)들이 토지에 대한 기대값과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매도나 양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소규모 농지를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주말농장이나 관광농장으로 변화시켜 농업이외에서 소득을 찾으려 할

것이다. 영세소농(零細小農)이 농공단지에 농외취업을 하면서 주말에 자기농장을 취미에 맞게 가꾸는 문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주말농장의 나아갈 방향은 토속적 품목이나 고가치의 자연식품을 생산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농업은 수출농업이나 수입대체농업과는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는 수입이 어려운 농산물을 중심으로한 국내수요충족형(國內需要充足型)의 전통농업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존속할 것이다.

부패하기 쉬운 채소나 토속과실, 미곡등이 전통적 생산농가에 의하여 개방화 물결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생산될 것이다. 물론 이들 농가는 가격 및 소득의 불안정과 상대적 빈곤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타업종의 기회비용(機會費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계농업의 형태로 계속 잔류할 것이다.

## 4. 우리농업의 개발전략

### 가. 기초작업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근대화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지구 모를 확대해야 한다.

1.2ha의 분산된 농토에서는 기계화는 물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능율(高能率) 농업생산을 기대할 수가 없다. 경지정리와 수리시설이 미미한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소유상한제를 폐지하고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토를 구입치 못하도록 규제법을 제정강화하고 장기임차제를 도입하며 농지에 대한 세제를 완화하는등 과감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부채지주, 이농, 은퇴농의 농지를 전업농이 구입하도록 농지구입자금을 과감하게 대출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필지합병과 교환분합을 통하여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 나. 농업기술혁신

농업생산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가운데 제일 중

요한 것이 바로 기술혁신이다. 품종개량과 같은 생물학적 기술과 비료·농약등의 화학적 기술, 농기계 중심의 기계적 기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농민의 농업경영기술이다.

이를 위하여는 농업기술기관을 통폐합하여 현실에 맞게 재편하고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투자를 확대하고 첨단기술(尖端技術)을 집중개발하여 응용과학 분야에서는 산학협동(産學協同)체제를 강화하고 품종보호법을 제정하며 농업자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와함께 기술개방을 통한 선진국 기술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 다. 농업인력개발

농업의 근대화를 위하여는 무엇보다 인력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업의 주체는 인간이요 인간에 의하여 농업이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는 농과계학교와 농민후계자를 연계시켜 산학의 일관된 체계를 확립,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한 후계자를 선발,

소정의 교육훈련을 시켜 기초정착금을 과감하게 상향조정시켜야 한다. 한편 농업경영주에 대한 현장위주의 경영교육을 강화하고 농민대학을 설립하여 우수한 농민을 양성시키고 성공지역을 견학시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 라. 농산물 가격, 유통정책의 개선

산업농 아래서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않고서는 확대생산을 할 수 없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는 주곡가격의 지속적 지지와 고추, 마늘같이 변동이 심한 농산물은 가격안정대를 확대해나가며 참깨, 땅콩같은 품목은 가격수준을 현실화하여 충분한 물량을 수매하고 육류가격은 자율시장기능(自律市場機能)을 원칙으로 하되 진폭이 클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고 등급가격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채소, 과일의 경우에는 생산단체를 통한 수급조절을 실시하고 생산과잉시에는 결손지불제등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공영도매시장을 확대건

설하여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제도(公正去來制度)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농업관측을 통한 정확한 정보와 표준규격거래를 강화하고 수입부과금에 의한 농안기금조정을 확대해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마. 가공산업육성과 수출시장 개척

생활향상에 따른 가공식품 수요가 급증되고 수입농산물의 가공식품이 많아 이 사업의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농산물가공산업을 농림수산부로 이관하여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농산물가공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대폭적인 지원이 아쉽다. 한편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추천제도를 개선하고 수출검역제도를 간소화하며, 수출농산물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수요에 대한 시장유통정보를 신속히 받아들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 바. 각종 자원이용의 극대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국토의 66%인 산지자원과 해양자원을 극대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산지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다목적으로 이용, 개발함으로써 생산지, 휴양지, 삼림지등으로 구분, 적지적용도로 개발하여야 한다. 한편 해양자원도 농업적으로 개발하여 양식업과 증식업으로 구분발전시키고 내수면 개발에도 눈을 돌려 적지적어종을 개발, 부가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농가소득과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계기로 우리농업에 변혁을 가져와야 한다. 주위의 유리한 여건을 총동원하여 불리한 여건과 싸워 이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응방안이다”라는 명답은 나올 수가 없다.

정부와 농민과 온 국민이 혼연일치라 되어 농업인구를 줄이고 농업구조를 개선하며 농가소득을 올리는 길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는 우리농업을 자본과 기술을 집약시킨 수출농업으로 육성하는 길뿐이다.